

2022년 용안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사개요

- 감 사 기 간 : 2022. 11. 28. ~ 12. 1. (4일간)
- 감 사 범 위 : 2020. 1. 1. ~ 2022. 10. 31.
- 감 사 반 : 감사계장 등 4명
- 감 사 중 점
 -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사회복지, 농업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II 지적사항

| 일련 번호 | 제 목 | 조 치 사 항 | | |
|----------|------------------------------|--------------|-----------------------|--------------|
| | | 행정상 | 재정상 | 신분상 |
| 계 | 10건 | 시정 5 주의 5 | 세입 1 회수 1 (○○○) | 주의 3 (●명) |
| 1 |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주의 | | 주의 (◇명) |
| 2 |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 주의 | | 주의 (□명) |
| 3 | 공공요금 자동이체 및 통장관리 소홀 | 시정 | 세입조치 (■) | |
| 4 | 주민자치위원 구성 등 관련 업무 소홀 | 주의 | | |
| 5 | 의료급여증 회수 업무 소홀 | 시정 | | |
| 6 |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관리 소홀 | 시정 | | |
| 7 | 통합사례관리가구 사후관리 소홀 | 시정 | | |
| 8 | 사망자 인감대장 말소처리 소홀 | 주의 | | |
| 9 | 인감증명서 위임신청 발급 및 관계서류 작성관리 소홀 | 주의 | | 주의 (◇명) |
| 10 | 공익형 직불금 지급 부적정 | 시정 | 회수 (○○○) | |

1.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등의 지급 시 사용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 하되,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급량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용안면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 ○○○ 워크숍 중식비를 지출하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행사실비 보상금 급식비 지급단가 기준에 맞지 않게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로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해 역무 대가로 지급 할 수 있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용안면에서는 ‘◆◆◆ ◇◇◇ 납부’ 등을 집행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아닌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3. 공공요금 자동이체 및 통장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요금 자동이체 시 매월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1%(최대1,000원)를 할인해주고 전자고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200원을 할인해주는 인터넷 빌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에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징수결정의취소경정 등),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에 따라 각종 과오납금, 일상경비, 개산금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이나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용안면에서는 어울림센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을 집행하면서 자동납부 및 인터넷 빌링 신청을 통해 공공요금 절약 지출이 가능함에도 2011년 11월 ~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납부가 아닌 고지서로 지출 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행정복지센터 상하수도 요금을 자동이체 통장에 지급하면서 오입금으로 인한 잔액 〇〇,〇〇〇원이 고정잔액으로 남아 있는데도 반납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공요금 자동이체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4. 주민자치위원 구성 등 관련 업무 소홀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개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용안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기준 주민자치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였으며,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 위원 인적사항 공고를 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음.

5. 의료급여증 회수 업무 소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의료급여증의 발급)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동법 제3조의 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에 따라 수급권자가 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규칙 제15조(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동법 제3조(수급권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동법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에 수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급여증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0~2021 의료급여사업안내’ (제2편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III, 수급자 자격관리 6. 의료급여증)에 따르면 ①수급권자가 수급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때 ②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 ③기타 전출입으로 인한 전 보장기관의 의료급여증, 자격취득상실, 기재사항변경, 종별변경, 가구주변경 등에 따른 구 의료급여증 등은 반납 및 회수하여야 함. 특히 위 지침에서는 시·군·구·읍·면·동은 의료급여증의 타인대여, 유효기간이 종료된 의료급여증 계속 사용 등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증을 철저히 회수 하여야 하며, 의료급여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 부정 사용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향후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하고, 반납·회수된 의료급여증은 보관에 따른 분실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즉시 폐기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용안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가구원 추가 등으로 의료급여가 중지된 ○○○○ 등의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채 의료급여증을 회수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관리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장애인 등록 취소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을 받은 사람이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 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 p122에 따르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를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용안면에서는 별첨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 등으로 회수사유가 발생한 ㉠㉠㉠ 등 ◆◆명의 장애인복지(통합)카드를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 통합사례관리가구 사후관리 소홀

- 「사회복지사업법」 및 「2020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를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2018년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국 읍면동 확대 시행 및 복지대상자의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정확한 생활 실태와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선제적 복지서비스 지원 및 예방적 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서비스 수요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통합사례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20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가구 개입 종결 후 9개월 내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용안면에서는 지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종결된 가구에 대하여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9개월 이내 2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기한내 미실시하거나 1회만 실시하는 등 통합사례관리 가구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사망자 인감대장 말소처리 소홀

- 「인감증명법」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는 것을 안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망자 매화장 처리결과 통보 또는 사망신고를 접수한 등록기준지에서 통보되는 가족 관계등록신고사항 통보에 따라 인감신고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직권말소 처리하여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과 같은 인감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야 함.

▶ 그러나 용안면에서는 ○○○○ 등 ■■■명에 대해 경로장애인과에서 발송한 매화장 처리결과 통보 공문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통보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인감대장을 말소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1~6일 지연한 후 직권 또는 사망신고에 의거 말소처리 한 사실이 있음.

9. 인감증명서 위임신청 발급 및 관계서류 작성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고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IV. 인감증명서의 발급,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에 따르면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위임자가 위임했다는 표시로 날인 또는 서명한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

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대리인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신청사항(증명인, 신청인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각종 신고서 및 위임장은 10년,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30년으로 정하고 있고, 전산상으로 인감증명발급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기발급대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인의 발급시 무인날인 때문으로 인감과 관련한 사건에서 증거서류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인감증명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류인 만큼 인감증명을 위임발급 처리할 때에는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요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하거나 보완토록 하여 처리하고, 발급 후에는 위임장 및 발급대장 등이 적정 보존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발급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했음.

▶ 그러나 용안면에서는 ○○○ 등 □명의 인감증명 위임발급을 처리하면서 위임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위임장에 대하여 보완 요구 없이 그대로 수리하여 발급하였고, ◆◆◆ 등 ●건에 대하여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신청사항 기재 및 대리인 무인 날인 등을 누락한 채 부적정 발급처리 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및 발급에 따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발급대장 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10. 공익형 직불금 지급 부적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¹⁾」 제7조 (기본형공익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은 제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과 그 밖의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 법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제1항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1) 직접지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직접지불금이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 회복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2020.5.1.시행)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직불금 지급 시에는 농지전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지급했어야 함에도, 용안면에서는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농지전용 신고된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